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▶ 보도일시: 2014.8.8(금) 조간

<인터넷 8.7(목) 12:00 이후>

▶ 총 2 쪽

❖ 고용차별개선과장 임 승 순
서기관 김 태 현

☎ 044-202-7573

E-mail: kim27th@naver.com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‘14년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차별사례 60건 시정

— 비정규직 518명에 대한 임금 등 차별 6억5천8백만원 지급 조치 —

-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(5.1~6.30)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임금·상여금·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금품 6억5천8백만원(근로자 518명)*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,
 - * 임금(78명 120,412천원), 상여금·성과보상금·각종수당 등(137명 403,159천원), 교통비·피복비·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(303명 135,227천원)
-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·휴직수당·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.
- 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,

-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*을 내리게 된다.

* 노동위원회·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□ 특히, 금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·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

-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통비·차량유지비, 효도휴가비, 가족수당,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'12.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*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·시정토록 하고 있으며,

*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통하여 차별을 해소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차별사실을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시정지도하도록 개정('12.8.2 시행)

- 또한, 금년 9.19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, 고의·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,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'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'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김태현 서기관(☎ 044-202-75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